

프로축구 개막 대비 현장 점검 '만전'

우범기 전주시장, 민생현장 방문 일환으로 월드컵경기장 찾아 준비 상황 살펴

우범기 전주시장은 28일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찾아가는 '2024년 민생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찾아 전북현대모터스FC 구단 관계자와 전주시설관리공단 및 전주시 관계자들과 함께 프로축구 개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우 시장은 또 민생탐방 이후에는 전북현대모터스FC 구단 사무실을 찾아 구단 관계자와 프로축구 발전과 지역 연고 구단과의 상생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면담을 갖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주월드컵경기장은 '2002년 월드컵'과 '2017년 U-20월드컵'을 개최한 구장으로, 현재 전북현대가 홈구장으로 사용중이다. 시는 지난 2021년 36억 원을 투입해 경기장 관람석(응원석) 3500석을 접이식 좌석으로 교체하는 등 그동안 월드컵경기장 시설 유지에 공을 들여왔다.

시는 올해는 경기장 조명을 친환경 LED조명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야간 경기 시 다양한 퍼포먼스가 가능한 친환경 LED 조명으로 교체해 전력 소모량을 줄이고, 축구팬에게 더욱 풍성한



우범기 전주시장은 2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찾아 프로축구 개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볼거리를 제공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야구장 신축으로 인해 사라진 보조경기장을 송천동 실내 축구장에 천연잔디 구장으로 조성해 구단의 국제대회 출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주월드컵경기장으로 편리하게 갈

수 있는 전주시내버스 특별노선 1994도 오는 3월 1일 휴경기 개막전을 시작으로 올해 프로축구 전북현대모터스FC의 홈경기가 열리는 주말과 공휴일에 운행된다.

올해 1994 특별노선 운행방식은 예전과 유사하게 주말 및 공휴일 휴경기

시작 약 2시간 전부터 10대의 버스가 5~10분 간격으로 평화동 종점에서 출발해 전주한옥마을과 시의·고속터미널, 전주종합경기장, 전북대학교 등 주요 거점을 거쳐 전주월드컵경기장까지 운행된다.

첫 경기인 대전FC와의 맞대결은 오는 3월 1일 오후 4시 30분부터 시작되며, 전주시민들과 축구팬들은 편리한 1994버스를 이용하면 교통체증 걱정 없이 경기를 즐길 수 있다.

이도현 전북현대모터스 단장은 "1994 버스 운행 등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오가는 전북현대 축구팬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준 전주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 축구팬들과 지역 커뮤니티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를 지역 연고로 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준 전북현대모터스FC 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전주시민과 더불어 함께 하는 프로구단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전주시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지역 맞춤형 정책연구 본격화

전주시정연구원, 선도적 정책·미래도시 모델 개발 전략 제시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 이하 연구원)이 올 한해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과 전주시민의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연구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28일 '2024년도 주요계획'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고 "올해 시정 발전을 위한 분야별 정책연구와 연구역량 강화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를 위한 중점 추진 전략으로 △선도적 정책 및 융합형 미래연구과제 발굴 △지역맞춤형 정책 연구조직 구축 △시민체감 정책플랫폼 구현 등을 제시했다.

먼저 연구원은 전주시 현안 및 중점 추진사업에 관련 연구과제와 전주의 중장기적 미래 비전을 설계할 수 있는 융합형 미래 연구과제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우선 연구 인력이 확보된 △도시공간 △사회문화 △탄소중립·기후변화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과제심의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과제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연구원은 또 긴급히 요구되는 연구나 정책분석을 수시로 시행함으로써 시 정책에 활용되도록 지원 하는 한편, 연구역량 향상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시정과 관련성이 높은 법정계획 수립 등 위·수탁 과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연구과제에 선정된 이후에는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평가 체계를 마련해 연구성과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28일 '2024년도 주요계획'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가졌다.

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현재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제산업·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직을 충원 후 연구과제에 추가하고, 연구과제에 따라 석사급 위촉연구원도 선발해 연구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연구과제 수행 및 정책현안 수립 단계에 각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연구부대사업 및 지원사업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역 대학 및 공공기관, 국회·광역시 연구기관 등과 연구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연구과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주기적으로 △정책 간담회·세미나 개최 △자문 및 상호연구 지원 △공동 협업 연구 등을 추진한다. 또, 이렇게 강화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지역맞춤형 연구 조직 구축에도 집중한다.

끝으로 연구원은 정책 수요자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플랫폼 구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펼친다. /김욱기 기자

"난개발 부추기는 전주시 '조례개정안' 강력 반대"

전북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가져

전북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이정현 등)은 2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의 도시계획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대를 천명했다.

먼저 사전에 조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등 행정 절차를 거친 바없이 갑작스럽게 추진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 8일 △보전·생산지 지역에서 건축물 층수 완화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연립 및 다세대주택) 건축허용 △바다 평균 임목축적 개발행위허가기준 완화 △정제시설 건축 시 이격거리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들은 자연녹지지역에 연립주택과 세대주택을 허용할 경우 숲세권과 인접 농지에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이 붓물을 이룰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 어떤 토지주도 땅을 팔지 않게되므로 사실상 도시공원 매입 정책도 포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표고의 개발행위허용기준을



70m에서 100m로 올리게 되면 건지산 101m, 천장산 153m 등으로 산지의 대부분이 개발구역에 포함된다고 한다.

현재 전주시 자연녹지지역의 면적은 69.65km²로 용도지역 현황의 33.9%로 이곳이 개발압력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난개발에 불을 붙이는 것이라고 했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와 공동주택 난립 방지 등 완충역할을 해왔다고 한다.

조례가 개정되면 호성동 전주 동물원 뒤쪽 발과 과수원, 삼천산(해성고)일대, 황방산 주변 혁신도시 사면, 예코 시티 주변에 대규모 택지가 조성되고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다고 한다.

또 누군가에게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고 이는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규제완화가 필요하면 근거를 마련한 후 개발총량제나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등 행정의 책임성을 조례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전주시는 물론 우범기 시장도 탄소 흡수를 위한 녹지 관리와 도시공원매입을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며 시민의 헬세로 나무를 심고 정원을 조성하고 도시공원 사유지를 매입한다"며 "다른쪽에서는 조례를 개정해 대규모 자연녹지를 훼손하는 것은 엇박자 행정이다"고 질타 하였다.

이에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조례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하여 시민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하는 단계에 있다며 최종검토해 확정 후 그때 시의회에 상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난 8일부터 28일까지 제기된 여러 이의제기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게 된다고 했다.

또 개발행위허용기준을 표고 70m에서 100m로 올린다고도 경사도가 15도~17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있어야 하고, 17도 이상이면 표고 높이와 관계없이 개발 불가능하므로 산기슭 아래쪽 정도나 개발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덧붙이길 지역경제 등 이유로 건설업체 등에서 규제 완화 여론이 있으나 시는 특정 이해관계 대상자를 놓고 조

례안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농기센터-전주시니어클럽 도시농업 가치 실현 협약 체결

전주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성)는 28일 전주시니어클럽(관장 김호춘)과 '지속 가능한 도시농업 가치 실현과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주농업기술센터-전주시니어클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김중성 소장과 김호춘 관장 등 양 기관 관계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도시농업 활성화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 △도시농업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노인 교육협력 △그 외의 다양한 노인 일자리 창출 협력 △기타 양 기관의 상호발전이 필요한 사항 등 공동사업 발굴과 상생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민 안전 위협하는 '포트홀 제로화' 도전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26일 오전 도로부서 등 포트홀 관련 완산·덕진구청 및 분청 실·국·과장을 긴급 소환해 "해빙기 대표적인 시민민원사항 민원인 포트홀과 관련된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해결 방안을 즉시 강구하고,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곧바로 추진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이에 시는 곧바로 김중택 기획조정국장의 주제로 관계부서 긴급회의를 갖고, 포트홀 ZERO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당장 시는 포트홀 정비 인력과 장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완산·덕진구청과 시청 민원부서를 통해 접수되는 포트홀 민원은 구정별

자체인력(2개팀)과 전문업체 1개사(2개팀)씩 운영하여 1월부터 현재까지 2,285개소의 포트홀을 보수해 왔으나, 급증하는 포트홀 민원의 신속한 해소를 위하여 여기에 추가로 전문업체 2개사(4개팀)씩 더 운영하여 포트홀 정비를 진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완산·덕진구청 및 시청 도로부서 담당자로 구성된 기동순찰반도 별도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동과 기동순찰반 등을 통해 확인된 포트홀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보수공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당장 시급한 포트홀 개보수 공사가 마무리되면, 포트홀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다발 발생 지역을 선별해 도로 재포장을 추진한다. /김욱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김영태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